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취소... “오랜만에 평온한 주말”

전광훈 “국민걱정 덜기위해 중단” 서울시, 감염병관리법 따라 조치 종로경찰서에 참가자 처벌 의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었던 집회를 전격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여론 악화를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삼일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에서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대로 일대에 마련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4개단체 7개 천막을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어 철거반원들이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범투본은 22~23일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시는 24일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전 목사는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야외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고, 우리가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집회 개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범투본이 태도를 바꾼 것은 코

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여론 악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인 A씨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신천지처럼 공공의 적으로 몰릴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범투본을 보는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감염 확산을 이유로 범투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서 백기를 던진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회 참여자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가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범투본 등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만약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범투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위 시민이 범투본의 집회로 인해 감염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범투본을 포함 총 7개 단체를 고발했는데 참가자 면면을 특정할 수 없어 채증 사진을 찍어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 참가 혐의가 있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범투본을 포함 총 7개 단체를 고발했는데 참가자 면면을 특정할 수 없어 채증 사진을 찍어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 참가 혐의가 있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범투본을 포함 총 7개 단체를 고발했는데 참가자 면면을 특정할 수 없어 채증 사진을 찍어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 참가 혐의가 있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범투본을 포함 총 7개 단체를 고발했는데 참가자 면면을 특정할 수 없어 채증 사진을 찍어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 참가 혐의가 있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범투본을 포함 총 7개 단체를 고발했는데 참가자 면면을 특정할 수 없어 채증 사진을 찍어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 참가 혐의가 있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사장 소음 600건 넘어... 작년 1.5배 증가

서울시, 신청건수의 96% 공사장 5년간 피해보상액 배상금 10억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건축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건수가 600건을 넘어 전체 신청건수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약 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2건에서 2017년 178건, 지난해에는 2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분야별로 전체 접수된 분쟁건수 793건 중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636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줄어

들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접수건수가 늘어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 11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와 각 분야

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5개월이다. 법정처리기간인 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 이는 심사관의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내 종교시설 방역 강화에 12.5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들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자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방역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원은 25개 자치구별 5000만원씩 교부된다. 각 자치구는 관내의 교회, 성당, 사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시작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미 종교계 각 종단에 집회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도 지원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 5명 중 1명 “119 도움받아”

서울시민 5명 중 1명은 매년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접수한 119 신고가 650만건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신고 건수는 2017년 228만16건, 2018년 220만9342건, 지난해 205만6736건을 기록했다.

분야별 신고 건수를 보면 구급신고가 157만591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생활안전은 19만6868건, 구조는 12만 8557건, 화재는 6만7271건, 기타는 457만7480건 등이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처리된 건수는 2017년 27만463건, 2018년 27만3423건, 작년 27만7124건으로 확인됐다. 병원·약국 안내가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응급 처치지(35.3%), 질병상담(16.3%), 의 료지도(9.5%) 순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영상의료지도 시스템은 2017년 1151건 처리했지만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 모습

이후 점차 늘어 2018년 1215건, 지난해 1542건을 기록했다. 처리 유형별로는 질병이 1902건, 심정지 1544건, 중증 외상 462건 등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8227건으로 평균 6000건 이상으로 집계돼 일평균 16.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5978건이었던 서울시 화재사고는 2018년 6368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다시 5881건으로 감소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지가 7735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김현정 기자

IoT기술 접목... ‘QR형 뉴따릉이’ 도입

서울시, 통신망 활용 위치 추적 유지보수비용, 고장 적어 장점

서울시가 3월부터 QR코드를 한번만 스캔하면 손쉽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QR형 뉴따릉이’를 선보인다. 초·중·고 학생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싹 따릉이’도 생긴다.

서울시는 ‘QR형 뉴따릉이’를 내달부터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 새롭게 추가되는 500대에 시범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5000대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가하는 모든 따릉이는 QR형으로 보급된다. 시는 기존

단말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QR형 뉴따릉이로 100% 교체할 계획이다.

‘QR형 뉴따릉이’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락 방식의 QR형 단말기가 부착돼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따릉이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돼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반납은 단말기의 잠금레버를 당겨서 잠그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기존 LCD형 단말기보다 유지보수비용과 고장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QR형 뉴따릉이에는 LTE(롱텀 에볼루션) 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위



QR형 뉴따릉이

치추적 기능도 탑재돼 있다. 따릉이 무단사용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따릉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 15세 미만 초·중·고 학생들도 학교, 학원 등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싹 따릉이’를 시범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